

'봄철 산불 비상' ... 도, 특별대책 추진

전북자치도 산림당국, 기동단속반 주말연휴 산불예방 계도·단속... 4월 15일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불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에 먼저 나선다.

또한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산불취약 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지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주말에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몰 전후 및 강우예보 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에 전진 배치하였고,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과, 진화헬기(임차)를 이용한 공중감시 등 입체적인 감시를 펼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할 때에는 산불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진화 헬기·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라적으로 운영해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산불진화 '골든타입제' 이행제고를 위해 임차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공조를 강화해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과 산불진화 헬기를 총동원하여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태세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 산림청 관계기관을 비롯해 군 항공대, 전북경찰청, 전주기상지청, 한국전력, 전북지방우정청, 산림조합,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14개 시·군 등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중점 추진대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산불 진화인력 등 진화자원을 공유·지원하기로 했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입산자의 화기소지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절대 태우지 말 것과 산에 갈 때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道, 한달 여행하기 참여자 선정

'전북자치도' 곳곳 누비며 SNS·유튜브 등에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4 전북특별자치도 한 달 여행하기 1차 신청자 287명 중 팻캠프족 1팀, 위케이션 2팀, 일반여행자 17팀 등 총 20팀, 34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신청자 여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홍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 달 여행하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장기 체류하면서 여행하기를 원하는 도의 거주민들 대상으로 숙박비, 체험비,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여행 계획부터 체험, 홍보까지 진행하는 참여자 중심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자는 1월 7만 원 이내 숙박비

와 15만 원 이내 체험비 등을 지원 받는다.

특히 올해는 애견 동반형 시설 정보를 제공, 반려인도 모집했다. 1차 참가자로 선정된 20팀은 팀별로 전북자치도의 문화, 음식 등을 체험하고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의 곳곳을 누비며 개인 SNS·유튜브·블로그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1차 참여자는 7월 말까지 여행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재단은 올해 하반기 2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상세 모집내용은 추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2, 747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제1차 지역 통합방위회의 개최

민·관·군·경 안보태세 확립 김 지사,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를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35사단장, 통합방위위원, 경찰, 시·군, 국가중요시설, 유관기관 등 통합방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대남 위협 전망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방호태세 구축 △통합방위 작전 수행능력 발전방안 등에 대해 기관별로 발표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북자치도 통합방위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35사단장, 통합방위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지사,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우리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관·군·경이 함께 협력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더 새롭고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역점

사업들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항상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4월 19일까지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 건축의 발전을 위해 2024년도 한옥건축지원 사업대상자를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은

도내 한옥 건축을 희망하는 자에게 신청은 최대 5천만원,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000만원을 8동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신청은 4월 19일까지 각

시군 한옥건축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한옥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한옥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 신고된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된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한옥건축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아름다운 한옥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보건환경연구원, 잠복결핵 감염 검사 강화

고령층 신규 환자 비율 증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도내 잠복결핵 감염 검진 검사를 강화해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아무런 증상없이 결핵균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으나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발병할 수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집단시설 내에서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에게 전염될 수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집단 내 결핵 환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들을 신속하게 검사해 결핵 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를 치료해야

한다.

잠복결핵의 경우 증상이 없어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액검사 IGRA(Interferon-Gamma Release Assay)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결핵 환자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검사건수는 727건(양성률 26.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사건수 280건(양성률 15.4%)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잠복결핵검사를 통한 선별검사가 중요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353억원 용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용자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가축사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사료구매자금 1,353억원을 상반기 지원한다.

사료값 인상과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916억(68%) 우선 배정한다. 마리당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한우우 91%, 젖소 35% 인상 지원하며, 암소비육지원사업과 모돈이력제, AI 피해농가 등 정부정책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육두수, 대출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해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